

보 도 자 료			
금융위원회	보도	2017. 8. 7(월) 조간	배포 2017. 8. 4(금) 법무부
책 임 자	금융위 서민금융과장	담 당 자	홍상준 사무관
	하 주 식(02-2100-2610)		(02-2100-2612)
	법무부 상사법무과장		이규철 서기관
	이 진 수(02-2110-3167)		(02-2110-3256)
책 임 자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	담 당 자	대부업감독팀장
	박 상 춘(02-3145-6770)		신 동 우(02-3145-6774)
	금감원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장		대부업검사2팀장
	임 민 택(02-3145-8260)		진 태 중(02-3145-8267)

제목 :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.

-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-

◆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%로 인하 추진함('18.1월 시행 목표)

1 추진 배경

-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%로 조속히 인하 추진

* (7.19일, 국정기획위) '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
(7.26일, 31일, 금융위)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조속히 24%까지 인하

2 추진 내용 및 추진계획

- (개정 내용)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(§5,§9)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.9%에서 24%로 인하(금융위)

- 이자제한법 시행령*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%에서 24%로 인하(법무부)

* 「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」

- (추진계획) 입법예고(8.7일~22일), 법제처 심사(9월 중)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 '17.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

-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'18.1월 중 시행 예정

3 대출 이용자 유의사항

- 개정 시행령 시행('18.1월 中 예정)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, 연장되는 계약*부터 적용

* 사인간 거래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신규, 갱신계약부터 적용

- ⇒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는 않음에 유의

※ 다만,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, 대환,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

- 이에 따라,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%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권장

- 이용자분들께서는 계획하신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*

* 신용대출의 경우,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·대출모집인 등이 대부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3년,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

- 예를 들면, 급전 용도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대출을 1년 이하의 단기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

- 한편,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·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,

-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

< 서민금융진흥원 상담·연락처 >

접근 방법	이름	상담·연락처
유선	1397 콜센터	국번없이 1397
인터넷	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	www.kinfa.or.kr
대면상담	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	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방 * 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 및 별첨 참조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날개 들었습니다
바르게 알려드립니다

참 고 전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연락처(국번없이 1397)

순번	지역	주소	전화번호
1	강남	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(역삼동)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	02-3420-5455
2	양천	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	02-6925-6869
3	광진	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5층	02-6925-3700
4	관악	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	02-6332-5530
5	노원	서울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3층	02-936-1028
6	중앙	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빌딩 6층	02-2128-8243
7	부천	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	032-668-5201
8	수원	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스원빌딩 8층	031-891-5500
9	성남	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	031-697-8136
10	고양	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5층	031-365-5200
11	안양	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	031-468-8982
12	안산	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	031-546-3474
13	의정부	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	031-837-2194
14	인천	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	032-214-5501
15	부산	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일천 국민연금공단 16층	051-710-2263
16	사상	부산 사상구 사상로 200 엠시티빌딩 7층	051-315-8973
17	대구	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55 sc제일은행 4층	053-252-6480
18	울산	경남 울산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	052-933-5500
19	창원	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다미서로 60 창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	055-713-5591
20	포항	경북 포항시 중흥로 2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	054-280-3281
21	구미	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	054-458-9570
22	거제	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29길 15 고현동 부산은행 3층	055-632-6172
23	광주	광주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	010-3626-7722
24	목포	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	061-285-8762
25	순천	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	061-746-6596
26	전주	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	063-716-9588
27	익산	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, SK빌딩 11층	063-852-4044
28	대전	대전 중구 중앙로 101 충남도청사 3층	042-719-8310
29	천안	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	041-621-6883
30	홍성	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61 충남빌딩 6층 301호	041-977-5500
31	청주	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미래에셋대우증권빌딩 4층	043-225-0027
32	충주	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	043-857-1107
33	춘천	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	070-4048-5278
34	강릉	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	033-930-5500
35	원주	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(무실동) 씨티타워 2층	033-735-8762
36	제주	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	064-901-3520

참 고 관련 Q&A

1. 인화된 대부업 최고금리(24%)가 적용되는 ‘연장’ 계약이란?

☐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고금리 인하 적용범위*는 현행 ‘16.3월 시행 대부업법 체계를 따른 것임

* 신규 계약 체결시, 계약 갱신시, 그리고 계약 연장시

☐ 계약의 연장은, 기존 계약의 만기 도래 후 대부이용자가 약정 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대부업자는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취하는 대부업계의 영업상 관행을 의미

※ 종전 법체계에서 해당 사례의 최고금리 인하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던 점을 감안하여 ‘16.3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시 포함

2. ‘18.1월 최고금리 인하의 여파로 향후 저신용자의 대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은지?

☐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은 시장 조정기간 등을 거쳐 2~3년여*의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

* 만기 미도래 대출 등을 감안시 24%가 전면적용되기 위해 통상 2~3년 소요

☐ 다만,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 대응 하여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

① (불법 단속 강화)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검경 및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단속 및 감독 체계 강화를 추진

② (정책금융 확대)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

③ (복지 강화) 금융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·저신용자에 대해 복지시스템을 통한 부작용 최소화 검토